권두언

지방대 생존과 경쟁논리

신 극 범
대전대학교 총장

오늘날 지방대학의 생존문제는 위기 의식의 단계를 벗어나 이미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옛말은 아직도 우리의 교육문화에서 유효한 것 같기도 하다.

수년 전 문용린 당시 교육부장관이 지방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다. 그 때 한 지방대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양반 대우를 받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상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방 대학생 푸대접을 항변한 바 있다. 그 학생의 울분 섞인 발언이 화제가 되어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심정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방대에 근무하는 교수나 직원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지방대 지원정책이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과거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는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왔고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교육 여건의 격차도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고교 졸업생 수의 감소, 수도권 대학으로의 지방 우수학생 유출, 기업들의 지방대 졸업생 선발 외면, 교육시장의 개방, 사이버대 등 신종 대학의 확대 등 이 모두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학지원정책이 경쟁논리로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어찌 보면 지방대의 어려움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마저 부족했던 대학의 책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자성론 내지는 책임론이 상당한 당위성과 설득력을 얻고 대학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을 찾기 위해 다양한 생존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구노력의 근원과

출발점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생존에 따른 경쟁논리로부터 비롯된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 문제가 과연 대학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가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졸업 후 취업이 보장 되고 제도적으로 국가 자격을 인정받는 이른바 의약계열 등 인기학과나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학생의 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통제하에 양적으로 성장하여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많을 정도로 무모하게 팽창되어 왔다. 외국의 예와 달리 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받아 오늘에 이른 지방대학의 현안 문제에는 정부 정책의 책임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대 문제를 시장논리에 맡겨 해결하려는 움직임에는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교육은 인격과 능력 그리고 자질과 개성을 계발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지, 상대적 우열을 가리고 최후의 승자를 가림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또한 생존과 경쟁의 논리로만 좌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치부되고 있는 듯하다.

과연 지방대학의 생존과 위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경쟁과 힘의 논리에 있는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 누구나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 대학의 생존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경쟁이라는 것은 그 시작에 있어 적어도 여건과 조건이 보편적 · 상식적 판단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립과 사립, 그리고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 일반 대학과 특수목적 대학 등 대학들 간에 이미 형성된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생존과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기 이전부터 고착화되어 있다는 자명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과 힘의 논리만을 적용한다면 교육의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일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쟁논리와 시장논리를 교육에 적용시켜 교육 본연 즉, 인간교육에 위험성을 낳게 하고 있다. 물건이나 상품에는 일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인간에게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대학이 하여야 할 일이다.

물론 생존은 대학에 있어 절대적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지 않을 수 없고 또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언제까지고 대학만이 알아서 시장논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 교육은 기형적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이 부작용이 결국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또다른 기현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교육이 최고만을 인정하는 서바이벌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교육에 있어 시장논리가 더 이상 생존경쟁으로 직결되는 오류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에 위치해 있건 수도권에 위치해 있건 각 대학 고유의 교육기능에 상응하는 대폭적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교육